

페리보고서와 대북 정책 방향

김영희 / 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현대판 붕이 김선달

이 자없이 흐르는 대동강물, 아니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재산인 대동강물을 제것인양 팔아서 致富한 김선달의 기업 정신은 실로 놀라운 데가 있다.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수단이다.

김정일은 현대판 붕이 김선달이다. 그는 금창리에 있는 땅을 깊숙이 파고 거기 수상쩍은 또는 적어도 수상쩍어 보이는 지하 시설을 만들었다. 파낸 흙이 수북이 쌓이면 당연히 미국의 정찰 위성에서 포착된다. 김정일의 북한은 그 지하 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에게 몇차례 보여주지만 하는 대가로 60만 톤의 식량을 받아낸다. 그리고 금강산을 개방하여 10억 달러 가까운 '권리금'과 많은 입장료 수입을 올린다. 대동강물이 흘러도 또 상류에서 다른 물이 끝없이 흘러오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구경을 해도 금강산은 닳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안내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자본주의 병균을 전염시킬 걱정도 없다.

김정일의 商術은 김선달 뺨치는 실력이

다. 거기에다 김선달의 물장사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내수 산업이었던 것에 비해서, 김정일의 '땅파서 달러 벌기'는 요즘 말로 하면 다국적 기업이요, 수출 산업이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을 휘두르면서 실리를 챙길 줄 아는 김정일은 김선달보다 한 수 위 같다.

김정일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생각하는 게 조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는 도대체 비합리적이고 광적이고 즉흥적이고 정서 불안에 빠진 사람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태일랜드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의 망명 사건으로 북한과 태일랜드가 외교 분쟁에 휘말렸을 때, 북한의 협상 태도를 보면 김정일과 북한의 행동 양식은 서방 세계의 어느 나라 못지 않게 합리적이었다. 북한은 태일랜드 당국과의 협상에서도 지킬 룰(rule)을 철저히 지키면서 후퇴할 때는 지체 없이 후퇴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런 세일즈의 귀재를 상대로 햇볕 정책과 포용 정책을 펴야 하니 협상이 힘들 수밖에 없다.

통일 유보는 남북 긴장 완화의 필요 조건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에게 세일즈하려고 하는 햇볕 정책은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햇볕 정책은 무엇보다도 법적·정치적 통일을 아주 먼 훗날로 미루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사실상(De facto)의 통일을 목표로 삼는다. 북한에게 경제 협력을 하고 식량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 주고 하나 받아내는 상호주의도 적용하지 않는다. 비료도 그렇게 주고 식량도 그렇게 줄 용의가 있다.

햇볕 정책의 내용 가운데서 북한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게 한국 눈치 보지 말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라는 청신호를 보낸 것이다. 경제 제재도 풀고 연락사무소도 설치하고 국교도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寤寐不忘 바라던 일이다.

북한의 생각으로는 미국과 수교를 하면 바로 일본과의 수교가 뒤따를 것이고,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하면 일본에서 과거 식민지 통치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고 1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의 북한에게 50억~100억 달러는 천문학적인 거액이다. 빈 집에 황소 들어간다는 속담이 무색할 정도의 큰 돈이다. 거기다가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일본과 유럽의 다른 나라 기업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햇볕 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의 180도 전환이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것은 동유럽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고 4년 뒤, 구소련이 붕괴하고 2년 뒤다. 사회주의체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예상될 때다. 북한이 느끼는 체제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의 위기는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구소련이 북한에 제공하던 경제 지원이 끊겼다. 공산권 국가들간에 통용되던, 이른바 우호 가격으로 수입하던 석유를 포함한 모든 물자가 국제 시장 가격으로 뛰었다.

1994년 7월 김영삼·김일성의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김일성이 사망하자 북한의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는 바로 북한의 붕괴를 예상하고 또 기대했다. 대책없이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 통일을 희망했다. 김영삼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앞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다. 1993년 11월 백악관에서 열린 김영삼·클린턴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前 대통령은 두 나라 실무자들이 합의한 대북 일관 타결안을 견어쳤다. 한미 관계는 크게 후퇴하고, 클린턴의 백악관과 국무성은 김영삼 정부를 불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일으킨 핵위기가 절정에 이르러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할 준비를 하자 이번에는 김영삼 정부가 거세게 반발했다. 북한에 미사일을 날리면

북한의 너죽고 나죽자식의 '물귀신 작전'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걱정이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생각이었다.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태도는 일관성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이었다.

오늘의 현실에 맞는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김대중이 집권한 것이 다행이다. 통일을 유보하지 않고는 남북 관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남북 긴장 완화의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도 필요한 조건이다.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한미간의 견해차

그러나 북병은 워싱턴에 있었다. 미국 의회는 공화당의 장악 하에 있다. 공화당에는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많다. 그들은 제네바 핵합의에 당초부터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켜 핵확산금지체제(NPT)를 살리는 데 급급하여, 북한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것이 공화당 사람들의 주장이다. 북한에게 50억 달러가 더 드는 경수로를 지어주고 중유를 지원하고, 또 단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는 합의는 공화당 사람들의 불만을 자극했다.

그들이 클린턴의 대북 정책에 거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대포동을 시험 발사하여 일본을

발각 뒤집고 미국 여론과 의회를 들쭉서 놓았다. 같은 시기에 외교협의회(CFR)가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그동안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던 많은 전문가들이 懷疑的인 자세로 돌아섰다.

엮힌 데 덩친 격으로 터진 것이 금창리 지하 시설 사건이다.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네바핵합의로 의회와 국민을 속였다고 믿었다. 사실 제네바핵합의의 가장 큰 약점은 북한의 그때까지의 핵개발 실적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기로 한 대목이었다. 북한의 과거 핵은 덮어두고 합의를 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만큼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제네바합의에 서명을 한 것이 화근이 되고 있다. 금창리 시설의 의혹이 해소된다고 해도 제2의 금창리·제3의 금창리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때마다 미국이 대가를 지불하고 현장 확인을 한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아닐 수 없다.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총점검하여 솔직한 보고서를 내고 그 안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 노선을 건의한다는 것이 페리보고서의 기본 취지다. 페리는 공화당 사람으로 부시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신망이 있던 사람이다. 그를 대북 정책의 조정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의회를 다독거리자는 것이 클린턴 대통령의 의도다. 그러나 페리의

입장에서 보면 보고서를 꼭 클린턴의 입맛에 맞게만 쓸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페리보고서에는 지금의 대북 포용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즉, 포용 정책을 유지하되 의회의 불만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페리보고서의 역할이다.

우리 관심의 초점은 다른 데 있다. 페리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햇볕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의 미묘한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서 북한에 주고 북한의 상응한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정책은 이정표(road map)에 따라서 북한의 호응을 봐가면서 경제 제제도 풀고 관계 개선도 하는 상호주의 방식이다. 한국의 일괄 타결 방식을 가지고는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없다. 북한이 받기만 하고 아무 것도 내놓지 않고 미사일을 날리고, 잠수정을 남파하고, 괴선박으로 일본을 놀라게 하고, 수상쩍은 지하 시설을 만드는 벼랑 끝 전술을 계속할 경우, 일괄 타결은 북한의 逸脫된 행동을 장려하는 결과밖에 안된다.

페리는 저서 「예방적 방어」의 에필로그에서 김대중 정부의 일괄 타결 방식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페리는 몇차례의 한국

방문을 통해서 견해차를 많이 좁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북한과 화해하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미국은 일종의 인내의 한계선(red line)을 그어놓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이나 핵개발, 대남 도발 등으로 그 선을 넘으면 물리적인 힘을 포함한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가 한국의 햇볕 정책의 틀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게 대북 정책은 전체적인 세계 전략의 고리 가운데 하나다. 그것이 중요한 고리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한반도가 유일한 생존 공간이다. 우리의 안전 보장에 한 번 해보고 안되면 노선을 바꾸는 시행 착오는 용납이 안된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런 입장 차이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고 핵확산금지조약을 유지해야 하는 강대국의 입장과 한반도의 냉전 종식을 통해서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찾으려는 한국의 구체적인 이해의 충돌인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내심이 필요한 때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합리적인 대북 정책을 채택한다고 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특히,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는 남북 대화와 화해가 선결 문

제인데, 아직은 김정일에게 남한을 상대로 정부간의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의 햇볕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북한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과의 조건없는 관계 개선·식량 지원·경제 협력·금강산 관광 같은 유인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어떤 물밑 교감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다. 그 교감의 상대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김정일의 의향을 어느 정도나 대변하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정부의 안보팀은 북한의 교감 상대를 상당히 신뢰하는 것 같다. 그러나 김정일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바라는 대로 북한 경제를 시장 경제로 개혁하고 북한을 개방하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많은 북한 사람들이 외국인들과 접촉하게 되고, 물질적인 것에 맛이 들리게 되고, 결국은 북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로 연결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체제 변화에 대한 욕구일 것이다.

김정일인들 개혁·개방의 혜택과 이점을 모르겠는가. 그가 걱정하는 것은 개혁·개방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투자와 기술이 북한 지도층에게는 트로이의 목마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단축하는 개혁을 하겠는가.

김정일의 경우는 그런 사태가 단순히 지금의 지도부의 종말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체제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포용 정책이라 불러도 좋고 햇볕 정책이라 불러도 좋다. 통일에 대한 환상과 感傷을 버리고, 평화 정착과 남북의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게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과의 수교를 포함한 관계 개선을 서두르도록 촉구하는 것도 용기있는 대승적인 자세로 전폭적으로 지지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아직은 한국과 미국측의 요구대로 개혁·개방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하고 계산에 넣어야 한다. 북한에게 서서히 변화하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북한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북한은 최근 몇년 사이에 세 자리 숫자의 유학생을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중국에 보내 자본주의의 '가가거겨'와 경영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 작년에는 헌법을 고쳐 시장 경제 원리를 조심스럽게 도입하고 있다.

김정일에게는 북한체제를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의 논리와 속도에 따라서 북한을 개혁하고 개방하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페리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지간에 우리의 햇볕 정책과 미국의 포용 정책의 기조만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라면 걱정할 것 없다. 대북 정책의 성공의 비결은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임을 명심하자. 